주간통일정세 2012-33(2012.08.06~08.1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33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은 행보, 여동생 김여정이 연출?(8/6, 아사히신문)

- 북한이 최근 미국 만화영화 캐릭터를 공연에 등장시키는 등 변화를 모색하는 배경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함.
- 김여정이 최근 조선노동당 제1과장에 취임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본 신문의 서울발 기사에서 전함.

○ 김정은 '을지연습' 앞두고 군부대 잇단 시찰(종합)(8/7, 조선중앙통신)

- 김 제1위원장은 제552군부대 산하 구분대와 우수부대를 뜻하는 '오중흡 7연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제552군부대 관하 구분대를 방문해 근무지휘실과 전문연구실 등을 돌아보고 "지휘관은 정황을 신속히 분석 판단하고 유리한 전투환경을 마련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전투문건 수정보충 사업을 짜고 들어 모든 군인이 전투임무에 정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함.
- 그는 "군사복무는 혁명대학을 나오는 것과 같다. 정치사상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며 "군인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과 함께 특히 도덕교양에 품을 넣어 제대해서 사회에 나가도 한 몫 단단히 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함.
- 또 공군 제1017군부대를 방문해 비행훈련 진행 계획을 보고받고 훈련모습을 직접 참관하고 나서 "적과의 공중전에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비행 전투행동조법을 완전무결하게 숙련하기 위한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軍부대 · 지방 시찰까지 따라나선 北 리설주(8/7, 조선중앙통신)

- 김 제1위원장이 평안남도 운곡지구종합목장과 제552군부대 관하 구분대를 6일과 7일 각각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 7일 잇따라 보도함.
- 나중에 발행한 사진에서 리설주가 이번 운곡지구와 군부대 시찰에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

○ 北김병호 중앙통신사장, 선전부 부부장에 임명(8/8,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8일 "중앙통신사 김병호 사장이 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매체는 지난 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만찬 자리에 '김병호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참석했다고 전했지만 김 부부장의 부서는 밝히지 않음.

○ 北, 지하자원 무허가 수출 단속..軍 견제 의도(8/9, 마이니치신문)

– 북한이 인민군을 등에 업고 지하자원을 무허가로 채굴·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사형을 언급하며 강하게 경고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함.

– 최근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하자원을 채굴, 판매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채굴한 지하자원을 다른 나라에 제멋대로 팔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북한 인민보안부(경찰) 포고문을 본 신문이 입수했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8/6, 김정은 원수, 운곡지구종합목장 현지지도(8.6,중통·중방·평방)
  - 최룡해·현철해·김병호·황병서 동행
- 8/7, 김정은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제552군부대관하 구분대와 구분대관하 여성중대 시찰 및 중대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 관람(8.7,중통·중방)
  - 최룡해(軍총정치국장인 軍차수), 현철해(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軍차수), 전창복(軍 상장), 황병서·김병호(당 부부장들) 동행
  - 김정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대성구역종합식당' 일꾼들과 종업원 등에 감사(8.7,중방)
- 8/7, 김정은 최고사령관,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지도(8.7,중·평방·중통)
  - 최룡해(총정치국장)·현철해(인민무력부 제1부부장)·황병서·김병호(黨 부부장) 동행 및 리병철(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항공군 대장) 현지 영접
- 8/9, 김정은 제1위원장, 7.24 김일성사망 18돌 즈음 캄보디아 국왕이 경의를 표한데 대한 답전(8.9,중통)
- 8/11, 김정은 원수, 리근영(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인민과학자)과 로용권(조선인민군예술학원 교원, 인민배우)에게 70살 '생일상' 전달(8.11,중통·중방)
  - 김정은, 만수대지구 건설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8.12,중방)
- 8/12, 김정은 제1위원장, 8.12 故 정영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노력영웅, 軍 장령) 영전에 화환 전달(8.12,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조양탄광 현지 료해(8.11,중통・중방)
  - ・인민군들의 조양탄광마을 폭우피해 복구(1만5,000여㎥ 보강 등) 등 면모일신 성과 칭찬 및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고마움'이라고 칭송(8.11,중통・중방)
  - ・평안남도 개천-조양・개천-순천 철로복구 등 道內(신양군, 500m 도로복구・안주시, 5,000여세대 살림집 보수 등) 수해복구 성과 보도(8.11,중통・중방)
  - ・8월12일 장마전선 중부지방 이동 예견, 8월12~15일 北 서해안과 중부 일부지역 폭우 예보(8.11,중방)

나. 경제

○ 北 1인당 전력사용량, 1970년대 초 수준(8/6, 연합뉴스)

– 북한의 연간 1인당 소비전력량은 2008년 819kWh(킬로와트시)로 1971년 919kWh보다 낮았다고 통계청이 6일 '북한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북한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인당 소비전력량은 1980년 1천114kWh, 1990년 1천247kWh로 증가하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와 겹치는 1995년 912kWh, 2000년 712kWh 등으로 계속 낮아짐.

○ 北, 3대째 창성 띄우기…'지방경제 본보기'(8/7, 노동신문)

– "우리 당은 지방당 및 경제일꾼 창성연석회의 50돌을 맞는 올해에 지방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다 같이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는 원칙"이라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강조함.

– "장군님(김정일)은 2년 전 창성군을 본보기로 하여 지방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불길을 지펴주셨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창성을 내세워 지방경제 발전을 추동하려 했음을 밝힘.

○ 北, 계획경제 탈피 개혁 추진 조짐(종합)(8/9,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6일부터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며 "새 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해설자료를 지방당국에 내려보내 공장・기업소, 인민반 별로 설명회를 하도록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 '6・28 새경제관리체계'로 불리는 새 관리체계는 국가가 생산계획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장・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일정량을 국가가 가져가던 정량제 방식을 탈피해 전체수확량에서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이 가져가는 정률제로 바뀐다고 전함.

- **北,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조치 착수(8/9, 교도통신)**
  - 북한이 경제개혁의 하나로 생활필수품 등 경공업 제품의 가격 안정 조치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함.
  - 이 통신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생활필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에 나섰다고 전함.

다. 사회 · 문화

- **北도 총기류관리법 시행…"사회혼란 방지 조치"(8/6, 연합뉴스)**
  - 5개 장과 42개 조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기류관리법' 자료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09년 11월 정령을 통해 총기의 공급, 운반, 보관, 이용, 지도체계 등에 관한 전반적 규정을 담은 법령을 제정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입수하여 전함.
  - 법령은 저격용 무기, 사냥총, 경기용총, 총탄, 수류탄 등을 총기류로 분류하고 "총기류관리법은 총기류의 등록과 보관,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의 생명 ·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제정 의의를 밝힘.

- **北 주민들, 리설주에 호감(8/6, 아주주간)**
  -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홍콩 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가 보도함.
  - '리설주 · 수해 · 조총련 위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북한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다루면서 최근 평양을 다녀온 한 중국인 상인을 인용해 북한 주민들이 리설주를 패션 감각이 있고 단정하며 품위있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리설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평가를 소개함.

- **北 적십자의 '변신'…수해복구 앞장(8/7, 조선신보)**
  - "적십자회 각 지부는 현지에 적십자 구급처치초소를 설치했다"며 "이재민 3만2천여 명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살림집(주택) 복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북한 적십자회의 수해복구 활동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소개함.

- **북한 '고난의 행군' 이후 산림 급속히 황폐(8/10, 연합뉴스)**
  - 1980년대 까지도 비교적 울창했던 북한의 산림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급격히 황폐해 졌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탈북자인 강대규(45.가명)씨는 9일 오후 정부 대

전청사 소회의실에서 한 초청특강에서 이같이 증언했으며 강씨는 함경북도에서 산림 분야 일꾼으로 일함.

○ **北, 수해 복구에 '구슬땀'(8/11, 노동신문)**
- 수해를 입은 지역의 당 위원회, 인민위원회뿐 아니라 우리의 중앙정부 부처에 해당하는 내각의 '성'까지 이재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함.
- 노동신문은 11일 "성과 중앙기관의 일꾼들이 큰물(홍수)피해 복구사업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다"며 내각의 금속공업성과 무역성 등 여러 성과 중앙기관에서 구호품을 피해지역 주민에게 보냈다고 보도함.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수해지역 대외공개 신속…개방 신호탄?(8/6, 연합뉴스)**
- 평양에 주재하는 2개의 평가팀이 지난달 31일 홍수 피해가 가장 큰 평안남도 안주시와 성천군, 강원도 천내군 등 3개 지역을 둘러봤다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가 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이 최근 국제기구와 단체에 태풍과 홍수 피해지역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어 김정은 체제가 대외개방에 적극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음.

○ **北 "日 독도영유권 주장은 '조선재침론'"(8/6, 조선중앙통신)**
-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령유권' 주장은 조선재침론"이라면서 "일본에서 심심찮게 울려나오는 독도 령유권 주장은 다름 아닌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재침시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조선중앙통신 6일 논평을 통해 비난함.

○ **北, '한미 을지연습 항의문' 미군측에 발송(종합)(8/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박림수 대표' 명의로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앞으로 UFG 연습을 비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통지문에서 미국과 남측이 이번 훈련의 공격적인 성격을 "'연례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으로 가리워보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그 무슨 '신의와 투명성에 기초한 사전통보' 놀음으로 우리를 심히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 김영남, 베트남 주석과 협력확대 방안 협의(8/6, 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일 오후 쯔엉 떤 상 국가주석

등 베트남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北-日 적십자회담 9~10일 개최(종합)(8/7,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일본 간의 적십자회담이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함.
-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일본 적십자사 사이의 회담이 9일과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으나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일본적십자사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양측 실무자 3명씩 6명이 전후 북한에서 숨진 일본인 유골이 매장된 묘지 참배나 유골 반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힘.

北 김영남, 베트남 총리와 경협방안 협의(8/7, 신화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만나 경제, 무역, 투자 등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신화통신이 7일 전함.
- 김 위원장은 베트남 방문 사흘째인 이날 중 총리와의 회담에서 다각적인 관계증진 의사와 함께 베트남의 국가발전 경험을 전수받기를 바란다고 밝힘.
- 또 베트남이 전날 쌀 5천t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함.

北, 濠신문 '버릇없는 코리아' 표기에 발끈(8/7, 조선중앙통신)

- 호주 신문 '브리스베인 메트로'에 대해 "불량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단결, 친선, 진보의 올림픽 정신을 모독하고 체육을 정치화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불량배 짓"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함.
- 이 신문은 런던올림픽 국가별 메달 순위표에서 북한을 '버릇없는 코리아', 한국을 '멋진 코리아(Nice Korea)'로 표현한 것이 알려져 외교적 논란을 불러 일으킴.

美, 싱가포르 접촉서 北 강경태도에 실망(8/8, 자유아시아방송(RFA))

- 위트 전 담당관이 지난 7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반도 전문가와 미 정부 관리들에게 접촉 결과를 설명했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이같이 보도함.
- 이 전문가는 이번 접촉에서 북한이 매우 강경한 자세를 보였으며 이 때문에 북측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힐 것으로 기대했던 위트 전 담당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이 크게 당황하고 실망한 것 같았다고 전함.

北김영남 "베트남 경제 모델 공유하고 싶다"(8/8, 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일본 매체가 8일 하노이발로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상임위원장은 7일 응웬 떤 중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트남의 경제·사회 건설 경험과 관련해 "좋은 모델을 공유하고 싶다"고 한 발언에 베트남 측도 환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北, 中기업과 광산 3곳 합작개발 계약(8/9,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국기업과 북한 내 광산 세 곳을 합작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북한 조선투자사무소는 지난 6월 9일 중국기업인 베이징바오위안헝창국제무역유한공사와 북한지역 내 광산을 합작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9일 공개함.

美 "北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 원해"(종합)(8/9, 미국 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이른바 '6·28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불리는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선 조치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구에 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에 부합하고 북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北-日 적십자 '日유골문제' 의견 접근(종합2보)(8/10, 교도통신)

- 북한 적십자사 대표가 일본인 유골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교도통신이 10일 전함.
- 리호림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서기장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에 있는 일본인 유골문제와 관련, 일본 적십자사와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어느 정도 합를 봤다", "진지하게 협의를 했으며,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했다"고 말해 일본과의 협의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함.

6·15 남북委 "日 '독도영유권'은 군국주의 야망"(8/12,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남북 및 해외측 위원회가 광복절 67주년을 맞아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이들 단체는 공동호소문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국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함.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8.6~7 베트남·라오스 방문 동향(종합)
  - 베트남 주석(쯔엉 떤 쌍)과 8.6 회담(8.7,중통·중방)
  -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음.
  - 리룡남 무역상, 강민철 채취공업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등 배석
  - 베트남 주석 주최 연회(8.6) 및 '환영식'(8.6, 주석부) 참석(8.7,중통·중방)
  - 8.6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의례방문(8.7,중통·중방)
  - 베트남 정부수상(웬 떤 중)과 8.7 담화 및 '호지명' 묘에 헌화(8.7,중방·중통)
  - 김영남, 8.7 베트남 출발 및 라오스 비엔티안 도착(8.8,중통)

나. 6자회담(북핵)

北 박의춘, 북중 외교장관회담서 양제츠에 고성(8/6, 연합뉴스)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지난달 11일 캄보디아 놈펜에서 열린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에게 중국 언론매체의 보도를 문제 삼아 고성을 내며 항의했던 것으로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박 외무상은 환구시보가 7월 2일 자 사설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북한에 대해 중국이 반대 견해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음.
- 박 외무상은 회담장에서 중국 정부도 환구시보와 마찬가지 입장인지를 따져 물었던 것으로 전해짐.

北-美, 지난달 핵문제 비공식접촉(8/12, 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지난달 뉴욕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12일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소식통들은 양자간 접촉이 지난달 10일께 뉴욕의 북한 대표부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지난 2월 29일 발표된 합의 사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함.

3. 대남정세

개성공단 北 최저임금 67.005$..5% 인상(8/6, 통일부)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올해 개성공

단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 임금을 5% 인상키로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6일 전함.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기존 63.814달러에서 67.005달러로 인상 됐으며 인상된 최저 임금은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됨.

○ 北 장웅 IOC위원 "南 선수에 금메달 걸어줘 기뻐"(8/9, 미국의소리(VOA))

- 북한 출신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남한 선수에 금메달을 걸어줘 기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함.
- 장 위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자 체조 도마 결승에서 우승한 한국의 양학선 선수에게 금메달을 걸어줄 당시의 느낌에 대해 "스포츠는 정치와는 별개이고 우리 민족 성원이 금메달 따고 하면 기쁘고 좋은 것"이라고 밝힘.

○ 北 "'5·24' 해제·금강산 재개가 이산상봉 전제"(8/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적십자회는 9일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이제라도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측 인원들의 금강산 관광길을 열어놓아 상봉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마련할 것과 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함.

■ 기타 (대남)

- UFG 韓美合동군사연습(8.20~31) 관련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전쟁연습소동 중단' 주장(8.6,중통·노동신문·평방/운명을 건 모험을 하지 말라)
- [北 역사학학회 비망록(8.9)] 새누리당의 5.16 발언들(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오늘을 있게 한 근본초석 등) 관련 '유신독재를 찬미하고 있지만 그 정반대, 5.16쿠데타는 미국에 의해 계획되고 그 배후조정자도 미국'이라며 '유신독재의 부활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8.10,중통)
- 【北 군사대외사업국 대변인 기자회견(8.10)】 韓-中 국방전략대화시(7.31/ 베이징) 對北발언(도발에 단호한 자위적 대응 등)에 대해 '역적패당의 온갖 음모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과감히 짓부셔 나갈 것'이라고 비난(8.10,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2주 내 핵실험 역량 갖춰..정치적 대가 고민"(8/8, 연합뉴스)**

- 미국의 로스알라모스연구소의 프랭크 파비안 비확산 담당 고문과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6일(현지시간) 공개된 핵과학자회보(Bulletin of Atomic Scientists.BAS) 보고서에서 앞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진단함. 두 사람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핵실험에 필요한 갱도 굴착 등을 사실상 마무리 됐음.
- 북한은 2주 정도 내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핵실험에 따른 정치적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역을 늘리고 러시아 정부가 과거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등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두 나라와의 긴장과 향후 여파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나. 미·북 관계

○ **北, '한미 을지연습 항의문' 미군 측에 발송(8/6, 연합뉴스)**

- 북한이 이달 20~31일 열리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거듭 비난하고 나섬. 북한은 6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박림수 대표' 명의로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앞으로 UFG 연습을 비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은 통지문에서 미국과 남측이 이번 훈련의 공격적인 성격을 "'연례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으로 가려보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그 무슨 '신의와 투명성에 기초한 사전 통보' 놀음으로 우리를 심히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함.
- "앞에서는 무력침공 의사가 없다고 공언하고 뒤에서는 우리를 적대시하다 못해 최고 존엄을 해치는 특 대형 국가정치 테러음모를 꾸미며 반공화국 침략적대전쟁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라며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반미보복의지는 극한점에 이르렀다"고 위협함.

○ **"美, 싱가포르 접촉서 北 강경태도에 실망"(8/8, 연합뉴스)**

-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 간 비공식 접촉에 참가했던 미국 국무부의 조엘 위트 전(前) 북한 담당관이 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강

경한 태도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싱가포르 접촉에서 북측은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비핵화는 요원하며 북한은 더는 미국과의 '2·29합의'에 흥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올해 초 북측과 대화를 했던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는 이런 북측의 태도가 '북한도 미국과 함께 일부 신뢰구축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던 올해 초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RFA가 전함.

다. 중·북 관계

"北 박의춘, 북중 외교장관회담서 양제츠에 고성"(8/6, 연합뉴스)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지난달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양제츠(楊潔篪〈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에게 중국 언론매체의 보도를 문제 삼아 고성을 내며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짐.
- 박 외무상은 환구시보가 7월 2일 자 사설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북한에 대해 중국이 반대 견해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음.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합법화가 한국과 일본을 자극하고 대만의 핵무장을 불러 동아시아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만 통일 실현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게 뻔한 상황에서 중국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는 논리를 핌.
- 박 외무상은 회담장에서 중국 정부도 환구시보와 마찬가지 입장인지를 따져 물었던 것으로 전해짐.

北, 中기업과 광산 3곳 합작개발 계약(8/9,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국기업과 북한 내 광산 세 곳을 합작 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됨. 9일 북한 조선투자사무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지난 6월 9일 중국기업인 베이징 바오위안형창 국제무역유한공사와 북한지역 내 광산을 합작 개발하는 계약을 맺음.
- 조선투자사무소가 그동안 '채굴량 무제한'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됐을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지하자원 수출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신규 광산개발계획은 북한의 지하자원 유출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중국은 현재 북한 내 최대 구리광산으로 알려진 혜산청년광산에 8억6천만 달러를 투자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규모 광산인 무산광산에 대해서도 50년간의 채굴권을 갖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광물은 2008년 248만t에서 2009년 373만3천t, 2010년 479만9천t으로 증가했고, 2011년도에는 1~9월에만 842만t에

달함.

라. 일 · 북 관계

○ 北 "日 독도영유권 주장은 '조선 재침론'"(8/6, 연합뉴스)

-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한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 발표 이후 북한 매체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선 재침론'이라고 발끈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군사대국화라고 비판함.
-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논평을 통해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령유권' 주장은 조선재침론"이라면서 "일본에서 심심찮게 울려나오는 독도 령유권 주장은 다름 아닌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재침시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함. 통신은 이어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범죄국가"라면서 "독도는 영원히 신성불가침의 조선땅"이라고 강조함.

○ "北, 日 요리사 김정은 관련 발언에 분개"(8/8,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 가명)씨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관련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함.
- 자신이 지난 4일 북한에서 나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에 대한 인상을 말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북한 간부가 '분개하고 있다'고 전해왔다는 것임.
- 최고 지도자 가족에 대한 평가에 민감해하는 북한이 호의적인 발언에도 거부감을 드러내며 '입단속'을 한 셈임.

○ 日 외상, 북한과 대화 재개에 전향적(8/8,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의하면 겐바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전향적 입장을 밝힘. 이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에 진전된 입장을 보일 경우 대화 재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됨.
- 9일 열리는 일본인 유골 반환을 위한 북한과의 적십자 접촉에 대해서는 "유골 반환과 유족의 묘 참배는 인도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면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함. 북한과 일본 적십자사는 9일과 10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에 있는 일본인 유골 반환과 관련 협의할 예정임.
-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핵 · 미사일 문제 해결, 6자 회담 재개가 선행되어야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골 반환 문제 협의 등을 통해 북한과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일 · 북 적십자가 유골 반환, 납치 문제는 등한시하는 북쪽의 목적은 외화?(8/9,산케이 신문)**

- 일본 적십자사와 조선 적십자회는 9일, 북경 시내의 호텔에서, 북한에 남는 일본인의 유골의 반환이나 성묘의 실현을 향해서 의견을 교환함. 일 · 북 적십자 협의는 10년만이며 협의는 2일간 진행됨.
- 일본 측에는 타사카 부장 등 3명이 출석 하였으며.북한 측의 리호림 사무총장외 3명은 북한 대사관의 공용차로 회장에 도착했음. 일본 측 관계자에 의하면, 납치 문제에는 접하지 않고, 유골의 반환과 성묘에 초점을 한정한 상태로 대화가 진행되었다고 함.
- 국제사회에 인한 경제 제재에 처한 북한은 최근, 호우로 식량 사정이 한층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해짐. 북한이 협의에 응한 배경에는, 유골 수집 비용으로 해서 일본에서 제시한 외화를 김정은 제 1 서기가 내거는 「국민 생활의 향상」에 충당하고 민심을 계속 연결시키는 목적이 엿보임.
- 첫날의 협의 후, 일본 측 관계자는 "매우 좋은 분위기로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고 평가함 .북한의 리호림 사무총장은 "일본 측은 진지하게 토론을 진행시켰다. 내일(10일)에는 결과를 알 수 있다.모두 노력하고 있는 곳(중)이다." 라고 전하며 협의가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른 것을 시사함.

마. 기 타

○ **〈대북 수해지원..정부 관망세 · 민간 적극적〉(8/6,연합뉴스)**

- 지난 6~7월 집중된 태풍 · 폭우로 169명의 사망자와 144명의 부상자, 21만2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4일 전함. 또 8천600여동의 살림집(주택)이 파괴되고 4만3천700여세대가 침수됐으며, 농경지 6만5천280여정보가 유실되거나 매몰 · 침수됨.
- 대북 수해지원과 관련, 정부는 일단 "현 시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음. 정부는 북측의 태도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북측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는 지원 요청을 하면서도 우리 정부에는 손을 내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의 지원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우리 정부도 내심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임.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해를 남북관계 분위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북한이 남측 당국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본격적인 관계 회복이 쉽지는 않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분위기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임.

○ **개성공단 北 최저임금 67.005$..5% 인상(8/6,연합뉴스)**

-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이 6년 연속 5% 인상됨. 6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올해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 임금을 5% 인상키

로 합의함.

- 개성공단 최저 임금은 전년도 최저 임금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규정돼 있으며 2007년부터 이 상한선인 5%씩 매년 인상돼 왔음.
- 통일부에 따르면 사회보장료, 성과급,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11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짐. 올해 상반기에는 이 평균 임금이 130달러 수준까지 올랐음.

北김영남 "베트남 경제 모델 공유하고 싶다"(8/8, 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일본 매체가 8일 하노이발로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7일 응웬 떤 중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트남의 경제·사회 건설 경험과 관련해 "좋은 모델을 공유하고 싶다"고 발언함. 이에 베트남 측도 환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 4일부터 리용남 무역상, 강민철 채취공업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등과 함께 베트남과 라오스 공식 방문에 나섰으며, 베트남과는 경제협력 강화와 쌀 5천t 지원 등에 합의함.

정부 "北, 新경제조치 시범운영 가능성"(8/9,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이 이른바 '새 경제개선 조치'를 부분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이 당국자는 북한이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골자로 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도입했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대해 "개선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함. 북한의 '새 경제개선 조치'는 이른바 '6·28 조치'를 말함.
- 이 당국자는 북한이 배급제를 포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공식 포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농장이나 기업의 자율처분권을 확대하면 배급제를 공식 폐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배급제가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RFA는 6·28조치와 관련, 농업 수확량의 30%를 농민에 분배하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함. 또 국가기관과 교육·의료분야 직원을 제외한 주민들에 대한 배급제 폐지도 담고 있다고 보도함.
-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북한이 경제 관리방식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힘.

2. 주변국 관련

가. 한 · 중 관계

○ 김영환 측 "美 · EU의회 청문회 추진"(8/9, 연합뉴스)

- 중국에서 고문당했다고 폭로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측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고문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함. '김영환 고문대책회의'는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의 서울 종로구 옥인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중국에)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청한다."고 밝힘.
- 최홍재 대책회의 대변인은 "중국이 1주일 내에 공명정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김 씨의 고문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달 내에 김 씨 전기고문에 대한 청원을 '유엔의 고문과 기타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 및 처벌에 대한 특별 보고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함.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김 씨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 그는 "9월10일 시작되는 이사회의 진행일정과 발언자 등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김 씨가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또 중국 법정에 대한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은 어려울 것 같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나. 한 · 일 관계

○ 정부 유엔무대 동해 외교 '의미 있는 성과'(8/7, 연합뉴스)

- 세계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둠. 장동희 국제표기명칭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 동해 표기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 일부 국가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함.
- 당사국들의 짤막한 입장 발표로 끝났던 과거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남한과 북한, 일본 등이 3차례에 걸쳐 공방을 주고받았고 100여개 참가국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봄.
- 일본은 유엔 지명표준화회의가 동해표기 문제를 논의하는데 적절치 않으며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북한 대표는 다소 격앙된 어조로 '일본해'가 일제 식민시대의 잔재라고 규탄함. 특히 '조선 동해'를 주장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동해'만 언급하며 우리와 철저하게 보조를 맞춤.

○ "日, 한국 외교백서 독도 기술에 항의"(8/9,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이 한국 외교백서에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표현한 것이 자국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

이 9일 보도함.

- 일본 측이 6월에 발행된 외교백서에 대해 뒤늦게 항의한 것은 최근 일본 내 우익 성향 언론 매체가 이를 문제 삼았기 때문임.
- 8일자 산케이신문은 "한국은 매년 일본 외교청사나 방위백서의 독도 표기에 대해 항의하는데 일본은 한국의 국방백서에 대해서만 항의하고 외교백서는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함. 그러자 일본 외무성이 곧바로 항의하고 그 사실을 공개함.
- 요미우리신문은 또 한국이 독도 상공을 군 훈련 공역(MOA)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함.

MB 오늘 독도 방문…일 발칵 "대사 소환" 강력반발 (8/10, 헤럴드 경제)

- 일본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둔 이날 오전 독도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방문중지를 강력 요구함. 일본 정부는 만약 강행할 경우 항의의 표시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키로 함.
- 일본 유력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종군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관계가 더욱 냉각될 수 있다고 대서특필함.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최근들어 한국의 각료가 방문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함.
- 언론들은 이번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8·15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내놨음.
-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지시키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견해가 강하다며 정부 고위관료는 "독도를 방문하면 한·일관계가 긴박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일관계를 좋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음.
- 한 언론은 이번 독도 방문의 시기에 대해서는 일본 노다 정권의 약체화가 배경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함.

야스쿠니 참배 적절하다고 판단해 (8/10, 산케이 신문)

- 하타 유이치로 국토 교통상은 10일 오전의 기자 회견에서, 15일의 종전 기념일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각료로서가 아니게 사적으로 참배하고 싶다"라고 말함. 마츠바라 진 납치 문제 담당도 "20년 이상에 걸쳐 매년 8월 15일에 참배하고 있어, 금년도 적당 하다고 판단해 참석하고 싶다"라고 참배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음.
-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회견에서 "노다 요시히코 수상이나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것은 국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분간 자숙할 것"라고 말해 15일을 포함 수상·각료의 야스쿠니 참배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분명히 함. 또, 후지무라는 "수상은 작년 9월의 취임 회견에서 내각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 (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충분히 용서되고 있다"라며 자숙 방침은 내각 전체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혀 유이치로의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음.

– 타키 마코토 법무장관, 카와바타 타츠오 총무상, 코미야마 요코 후생 노동상, 나카가와 마사하루 방재 담당상은, 모두 참배하지 않는 생각을 분명히 함.

○ **작정한 일본, "국제재판소로 가자!" (8/11, 코리아 헤럴드)**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 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기로 함. 이에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힘. 정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며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 에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함.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11일 일본 취재진에 "우선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교도통신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당시에 일본이 독도 주 변 해양조사차 측량선을 출발시켰다가 한일 차관급 협의 후 중단한 사례를 거론함. 한편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를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이나 고위급 정기 협의를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짐. 다만 일본 정부 안에는 과잉 대응을 해서 필요 이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함. 앞서 일본 정부는 10일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직후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데 이어 무토 주한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대응조치 검토에 들어감.

다. 미 · 중 관계

○ **(중국)외교부, '美남중국해성명'에 대한 中입장 표명(8/6,중국 인민일보)**

– 8월 3일, 미국 국무원의 남중국해 관련 성명 발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관련 당사국의 남중국해 수호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평화 안정 노력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국)외교부는 전함.

–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 및 인근 해역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며, 이는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함. 1959년 중국은 광둥성(廣東省)에 복속된 시사, 난사, 중사군도 사무처를 설립하고, 시사, 중사, 남사군도의 산호초 및 해역에 대한 행정관할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싼사(三沙)시 설립은 중국 기존 지방 행정관할기관에 대한 필요 조치이자, 중국의 주권 범위 내 일이라고 주장함.

○ **"美中전쟁, 북한 붕괴로 촉발될 가능성 가장 높아"(8/7, 연합뉴스)**

- 8명의 미국 대통령 밑에서 20년 이상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해온 제임스 도빈스 랜드연구소 국제안보정책센터 소장은 7일 미국과 중국 간 전쟁에 관한 보고서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기고함. 도빈스 소장은 '중국과의 전쟁'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30년간 미중 간 군사충돌은 북한 붕괴가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북한은 경제실패나 권력쟁탈전, 남한과의 전쟁 패배로 붕괴할 것으로 내다봤음.
- 보고서는 북한의 통제력이 무너지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무장세력 간의 충돌을 피해 식량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북한 국경선을 넘을 것이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도 통제 불능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 그는 "이런 과정에서 우연이건 아니건, 미국과 중국 군대 간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결국면이 갈수록 격화될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 붕괴에 대해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 것 외에도 우방인 한국이 원하는 통일이냐, 아니면 중국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한반도 분단의 유지냐라는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라. 미 · 일 관계

○ **美, 日에 쓰나미 쓰레기 처리비용 요구(8/6, 연합뉴스)**

- 북미 지역의 태평양 연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으로부터 밀려온 쓰나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지원을 일본에 요구함. 6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환경성은 북미 지역의 태평양 연안에 표착한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쓰나미 쓰레기가 약 4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외국으로부터 표착한 바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규범은 없으며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는 것이 관행임. 하지만 오리건주 등 미국 태평양 연안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 부담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음.
- 일본 환경성은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미국 태평양 연안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임.

마. 중 · 일 관계

○ **인민일보, 영유권 갈등 日에 '자중' 경고(8/7,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댜오위다오(釣魚島 ·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자중'할 것을 경고함. 인민일보는 7일 '대립을 택하면 일본은 좌절감만 키우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칼럼 '종성(鐘聲)'에서 '절멸'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난함.
- 인민일보는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일본의 태도가 날로 강경해지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의 아-태 복귀 전략의 '앞잡이'가 되려는 충동, 정계 다툼의 셈법,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좌절감 해소 등의 복잡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함.

- 최근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경쟁적으로 댜오위다오의 일부 섬을 민간 소유주로부터 사들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함.

中 "센카쿠에 자위대 투입 절대 안돼"日에 경고(8/12, 한국경제)

- 일본이 댜오위다오(釣魚島 ·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분쟁에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중국 해군 장성이 강한 어조로 반발함. "일본이 해상자위대를 감히 출동시켜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위협한다면 해군은 절대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다만 인 소장은 "중국은 여전히 외교적, 법률적 수단으로 댜오위다오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군사적 수단 사용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를 담.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지난달 2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서 일본 영토나 영해에서 주변국에 의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때는 필요에 따라 자위대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함.
- 노다 총리의 발언 직후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의 극히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강렬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반발함.

바. 중 · 러 관계

러, 불법조업 中어민 65명 석방..4명은 계속 억류(8/8, 연합뉴스)

- 러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억류중이던 중국 어민 65명을 석방했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가 8일 보도함. 러시아는 그러나 이들 외에 선장 4명은 계속 억류한 상태에서 사법처리를 진행하기로 함.
- 특히 루룽위80-117호는 러시아 경비함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함포 사격을 받고 나서야 나포에 응함. 이 와중에 루룽위80-117호에 탄 어민 한 명이 실종되면서 한 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일었음. 어민 실종 조식이 전해져 국내 여론이 들끓자 중국 정부는 즉각 러시아 대리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음.
- 중국 정부는 65명의 자국 어민을 석방시키기 위해 이들을 대신해 러시아에 사실상의 벌금인 '어업 할당금'을 낸 것으로 관측됨.

사. 기 타

대만 · 日, EEZ 중첩 문제로 갈등 조짐(8/8, 연합뉴스)

- 대만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로 갈등 기류에 휘말림. 8일 영자지 차이나 포스트 등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최근 자국 해양 조사

선의 일본 EEZ 침범 논란과 관련해 일본 당국과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발표는 지난 5일 국립대만 해양대학교 소속 조사선이 일본 오키나와현 하테루마시마 근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하던 중 일본 해상보안청(해경)에 의해 퇴거 요구를 받은 뒤 나온 것임. 하테루마시마는 대만 동해안 이란((宜蘭)현에서 120해리, 일본 오키나와에서 260해리 떨어진 지점에 있음. 두 나라 모두 자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곳임.
- 대만 당국은 "양국이 입장 차이가 있지만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힘. 일본은 "문제가 된 지역은 명백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거듭 주장함.

"中군부-공산당, 위태위태한 권력투쟁"(8/9,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과 군부 사이의 권력투쟁이 심상치 않음.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올 초 연회장에서 만취한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장친성(章沁生) 상장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앞에서 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보도함.
- 그는 당이 자신을 명목상 지위는 높지만 실권이 없는 자리로 승진시키려는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짐. 중국 군부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면서 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음. 다수의 장성들이 최근 주변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는 남중국해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도 군부의 정치적 야심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함. 당 지도부는 올 초에 실각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가 군 내부에 상당한 동조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함.
- 일각에서는 당이 군부에 대한 안정적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후주석이 올 가을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에게 권력을 넘긴 이후 2년 정도는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후 주석이 중앙군사위 주석을 유지할 경우 시 부주석은 권력기반을 다지는데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NYT는 전함.

"구카이라이 변호인, 범행에 3자 개입 주장"(8/12, 연합뉴스)

- 구카이라이 변호인단은 지난 9일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구카이라이와 공범인 보시라이의 심복 장샤오쥔(張曉軍) 외에 제삼자가 개입한 정황이 있으며 최소 2명 이상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 변호인단은 범행에 사용된 독극물의 독성이 인명을 한 번에 앗아갈 만큼 치명적이지 않은 점과 범행 현장 주변에 발자국 등 외부인이 추가로 접근한 흔적이 있었던 점 등을 제시함. 아울러 구카이라이와 장샤오쥔이 범행 뒤 시신이 침대 위에 등을 대고 반드시 누운 상태가 되도록 뒀다고 진술했으나 발견 당시 시신이 바닥을 향해 엎드려 있었던 점 등도 또 다

른 인물의 개입 증거가 된다고 언급함. 변호인단은 이를 바탕으로 '고의 살인' 대신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변론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